

軍 성범죄 29건 중 20건 상급자 성폭력

국방부는 8일 성범죄 특별대책 테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총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20건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TF 활동 기간 중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의 사건이 신고됐다.

가해자는 총 38명으로 영관급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 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35명으로 영관급 1명, 대위 1명, 중·소위 8명, 후보생 1명, 중·하사 10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가해자의 76%가 영관장교와 원·상사 등이고, 피해자 94%는 중·하사와 중·소위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29건의 사건 중 TF 활동 기간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017년~2018년 1월 발생한 사건이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24건이 조사 중에 있으며,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한 2건은 사건처리가 종결됐다. 3건은 항고 중인 사건이다.

TF 활동기간 확인된 준강간 2건은 현재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다. 이중 1건은 지난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기부부대 소속 여군이 동료 남군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주가적인 보강수사를 진행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TF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TF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양성평등 의식개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性)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강사 이력관리 정보화시스템 개발하는 한편 국방부 내 국방 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

상급자 성폭력 가해자 76% 영관장교, 원·상사

피해자 가장 많은 계급은 중·하사으로 나타나

(예정)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메뉴얼 작성 등을 위해 운영훈령을 제정하고,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모든 장병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폭력 전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하며, 준강간·강제추

행 등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되던 군내 성폭력 실태 조사도 2019년부터는 국방 예산을 반영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정례화된다.

TF 관계자는 "특히 계급이 낮을수록 신고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며 "더 나은 군 문화를 위해서 남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일할 것인가와 함께 여군이 들어온 게 밥그릇을 빼는다는 인식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조직 만드는 게 필요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회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봄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훌씨

이비아날인 8일 경남 거창군 주상면의 한 양파밭에서 밭일하는 아낙들 사이로 민들레 훌씨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다.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전국 18개 병원 출산시 인터넷 신고 가능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산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성별 등 출생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한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산모 2명은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행사도 갖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신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우리 미혁이는요...
자체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 in
건강한 행복,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조기발전
자체치료 중인 민혁군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는 감염기(면역력 저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따른 조건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h-well

| 고객센터 1577-1000 |